

파병반대운동을 위한 인권단체 회의 회의록

- 일시 및 장소 : 2004년 7월 13일 10시 인권운동사랑방
- 참석 : 국제민주연대(최재훈), 다산인권센터(토리), 대항지구화행동(허용만), 사회진보연대(이소형), 인권운동사랑방(김명수, 이주영), 미디어 참세상(유영주), 평화인권연대(손상열)

* 오늘 회의의 논의순서와 상관없이 논의사항을 재구성하여 정리하겠음. 회의록 정리가 다소 주관적일 수 있음. 잘 못 정리된 부분은 지적해주시기 바람.

< 논의 내용 >

1. 8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 파병에 대응하여 어떤 활동을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파병이 강행된 이후 국면에서는 어떤 활동을 구상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논의했음.

2. 이와 관련해 현재 다른 모임에서 준비되고 있는 활동은 다음과 같음.

(1) 전쟁피해자와 함께하는 이라크 파병반대 전국도보행진 : 7월 24일(토)부터 8월 2일(월)까지 부산에서 서울까지 버스 및 도보행진 진행. 파병저지를 목표로 전쟁피해자(원폭피해자, 정신대피해자등)들과 <땅과 자유>라는 그룹이 중심이 되어 준비하고 있음.

(2) 이라크 평화네트워크 : 매주 목요일 피스몐과 군수물자수송을 막기 위한 직접행동(평화의 배피우기등)이 이야기되고 있다고 함.

(3) 부시낙선네트워크 : 부시(네오콘)과 블레어등을 전범으로 규정하고 단죄하는 활동의 필요성(전범재판 혹은 국제형사재판소 활용)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료 조사 등을 하고 있다고 함.

3.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진행되었음.

(1) 정부의 파병강행에 대한 항의행동을 조직해야 함. 또한 파병강행을 전후해 파병을 반대하는 대중적 동력을 형성하기 위한 계획도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임.

(2) 8월 3일(파병예정일)까지의 활동으로는 <땅과 자유>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산-서울 도보대행진>에 결합하기로 함. 이와 관련해 인권단체가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할 수 있는지 알아본 후 계획을 마련해 <인권단체 연석회의> 3차 정기회의에 제안하기로 하였음.

(4) 8월 3일 이후의 장기적 활동으로 <민중전범재판>운동이 제안되었음.

<민중전범재판>운동에 대해 △ 이 행사가 전쟁당사자들(부시, 블레어, 노무현, 고이즈미등)의 죄가를 민간스스로 단죄하는 의미가 있으며 △ 행사를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대중적으로 반전운동의 동력을 형성시켜보자는 취지 (예컨대, 재판을 위한 기소인, 배심원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다양한 평화행동을 추진해보는 것)에 어느 정도 공감이 있었음.

이에 따라 <민중전범재판>운동의 추진가능성을 타진하고 운동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7월 말경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대략 인권단체들, 이라크평화네트워크, 529팀, 부시낙선네트워크등을 대상으로 접촉해보기로 함.

4. 다음과 같은 이후일정을 확인하였음

(1) 7월 17일(토요일) 오전 11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후속회의 진행. 안건은

△ <도보대행진> 준비상황 공유와 인권단체들의 결합방안 -

대항지구화행동(허용만)이 주최 측과 연락해 준비상황을 알아오기로 하였음

△ 민중전범재판운동(혹은 간담회)에 대한 기초제안서 검토 및 후속활동 논의 :
평화인권연대(손상열)이 제안서를 작성해오는 것으로 함. 각 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어느 정도의 역량을 투입할 수 있는지 확인해오기로 함.
이상에 대한 논의이후 간담회를 조직하는 것으로 함

△ 기타 : 24일 집중집회에 대한 계획등 논의

(2)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5.29이후, 평화바람과 함께 하는 반전평화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워크샵이 진행됨. 워크샵 기획안은 별첨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끝)

2. 인권단체들의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평화권모임) 앞으로의 계획

1)논의 자료 : 마당에 있는 인권단체 계획 참조

2) 논의 내용 :

① 단기 계획으로서, 7월 24일~8월 2일 '전쟁 피해자와 함께 하는 이라크파병 반대 전국 도보행진'(대구의 '땅과 자유' 및 지역의 풀뿌리 단체들과 전쟁 피해자들이 함께 함)이 서울에 도착하는 8월 2일 서울 행사를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에서 적극 함께 준비하고, 결합한다. 풀뿌리 운동단체와 전쟁 피해자들이 함께 하면서, 적지만 대중들의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데 의미가 있음.

그밖에도, 이라크평화네트워크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한 강력한 항의 행동, '직접행동'을 제안하면, 인권단체들도 적극 검토한다.

② 중장기 계획으로서, 전쟁을 일으킨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이 전쟁에 참여한 노무현 정부를 전범으로 단죄하고 기록하는 민중법정을 준비한다. 시기는 연말 경. 법정에서는 법리적인 판단들이 정교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전범으로서의 규정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고, 법정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기소인 모집 혹은 배심원 모집 등을 통해 '전쟁 참여'의 책임에 대한 대중적 토론과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7월 말에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취지에 동감하는 모든 단체들이 사업의 계획을 마련하도록 한다.

==> 민중법정, 민간법정이 단지 운동단체들이 관성적으로 진행하는 하나의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대중들이 이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운동의 과정에 좀더 많은 고민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 제시.

③ 인권운동사랑방 내 담당자 문제 : 평화권 모임의 담당자는 이주영, 최근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의 담당자는 김명수임. 김명수 활동가가 국가보안법 사업을 진행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는 선에서, 일단 ① 8월 2일까지의 사업을 담당하고, 이후 국가보안법과 이라크 파병반대 운동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있으면 담당자 논의를 다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음.

3) 7월 17일(토) 평화권 모임 회의 후, 19일(월) 상임활동가회의에서 논의, 추진받기로 함.